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 마무리 총력

전북도·전북지방환경청, 추진상황·3월 강화대책 발표

2차 시행기간 전년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10% 이상 개선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도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도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인력을 활용, 산단 내의 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을 강화했다.

또, 시·군 31개 지점 139.1km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 일 2회 이상 도로청소 주기를 확대해 재비산 먼지를 저감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 12월~2020. 3월)를 시작으로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뒀고,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협력해 6개 분야 13개 과제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농업 부문은 불법 영농철을 맞아 각지에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토록 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해 도내 380개 공동집하장이 운영되며, 현재 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위주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50명을 채용, 산업단지 내 업체를 감시한다.

아울러, 드론 4대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부착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화하는 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조기에 확대 보급하는 등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디오파에

라 등 배출가스 단속장비를 활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 등 3만 여대에 대해 약 750억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승용차·전기버스·전기화물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확대 보급을 위해 3,063대에 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계절관리제 마무리에 접어들어 3월에는 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도와 함께 도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원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노후·위험시설 체계적 관리 기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군산시 선정

전북도는 9일 총사업비 18억원(국비 8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에 공모한 13개 지자체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해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선정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시설이 있는 내운동 등 23개 동·면 133개소(노후건축물 131개소, 교량 2개소)에 진동, 균열, 경사도 등의 사고위험 정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홍수재

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현재 설치 중인 중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군산 지역 신영대 국회의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익산지역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조해 공모 신청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군산시의 이번 사업 선정으로 노후 시설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전북도를 이루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는 안전 관련 사업공모에 적극 대응해 안전한 전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

전북도, 기술개발사업 본격 지원... 기관·기업 모집 공고

전북도가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구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미래선도를 위한 기술확보,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지원 관리를 담당하고, 9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기관과 기업의 모집·공고를 통해 4월 9일 1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6대 분야와 미래유망 및 신기술 5대 분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의 8대 기술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환경·에너지와 AI, IoT, 5G, 로봇, 미래 신소재 등의 미래·첨단유망 분야를 올해부터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과제 유형은 기관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내 혁신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한 ▲유망·핵심기술 국산화 분야 R&D 지원과 기업 단독 또는 기업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소부장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로 나눠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대상은 유형에 따라 도내 소재 기업과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4월부터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9일~4월 9일 16시까지 전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http://md.jb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전북도 R&D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제조업의 핵심 근간으로 소부장 기술개발(R&D) 사업이 도내 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가 오는 3월 말까지 도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약을 위한 집중육성을 위해 사업을 대폭 개편했다.

대상은 인증이나 인가, 지정이 3년 경과한 기업으로 집중한 반면에, 지원은 기존의 사업회비 지원에서 경영진단 컨설팅을 추가했으며,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기존 단년사업으로는 불가능했던 중장기 사업화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필수사항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 종합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북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총 3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5개 내외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에게는 올해 11월말까지 사업회비 최대 5,000만원과 경영진단 컨설팅을 지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사업회비를 2년간 더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선언. 한청애(앞줄 왼쪽 여섯번째)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50 기후금융 지지선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전북도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

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연간 초등학교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교 학비는 고지금액을 지원한다.

신청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교육비 원콜리, 복지로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노인복지기금 사업 공모 결과 8개 단체 선정

전북도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공모 결과 총 10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단체는 사업계획서와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10개 단체 중 2개 단체는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됐고 ▲싱글빙글 건강교실, ▲치매예방 건강교실, ▲토달공예, ▲미술공예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